

축산 규모화 · 전문화 가축질병관리 난망 가축 질병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농가의 '불신'



김수용 기자
농축유통신문

지난 30년간 산업 및 사회의 다각적 발달로 경제 규모화가 이뤄졌다. 축산업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는 개인농장으로부터 크게는 축산업 전반이 확대됐다.

축산업의 확대 이면에는 부작용도 함께 확대됐다. 그 중 하나가 질병이다. 소규모였을 때는 질병 관리가 그나마 수월했고 그로 인한 피해로 적었다. 하지만 축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질병 관리 어려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과거의 축산업에서 질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축산업의 발달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올해도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전국에 발병하면서 3월말까지 약 1100만수의 가금류 살처분으로 약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토종닭 한 농가는 AI로 인한 소비부진 등의 이유로 닭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30여년 전 양계산업도 농가의 질병컨트롤 능력 부족으로 소모성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2~3년 주기로 양계장을 이동하곤 했다. 이 시절만 해도 소독, 백신, 치료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사양관리가 너무나도 미약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축산업이 현대화가 되면서 농가의 질병에 대한 컨트롤과 사양관리 개선으로 농가들은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다. 그러던 중 구제역, AI 등의 악성전염병이 발병되면서 농가들은 차단

계속되는 악성질병으로부터 소독제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

아무리 좋은 소독약과 동물약품이 있어도 농가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질병을 이겨 낼 수 없다.

모든 축산농가는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소독순서 및 요령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사용을 해야 한다.

방역을 위해 소독을 점점 더 강도 높게 실행했지만 전염병을 막을 순 없었다.

농가들의 소독제에 대한 불만은 점차 쌓여가면서 결국 소독제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고 말았다.

그러자 정부는 농가의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2003년 소독제 품목허가에 안전·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물론 '소독제 효력 시험 지침(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효력시험을 실시해 가축질병 병원체에 대한 소독효과 입증을 각 업체로부터 받게 했다.

특히 계속되는 악성질병으로부터 소독제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소독제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표준시험법에 따라 효력시험을 실시해 소독대상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효력 및 유효 희석배수를 확인시켜야 한다. 또 실제 축산 현장에서 적용 상황을 감안해 온도, 유기물 조건 등 시험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 효력시험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시험은 위험성을 감안해 국내시험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의 구제역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협회와 소독제 생산·수입업체는 소독제 공동 효력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제 효력시험 결과를 반영해 시험을 실시한 병원체에 대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품목허가 부표에 기재하고 있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소독약과 동물약품이 있어도 농가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질병을 이겨 낼 수 없다.

모든 축산농가는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소독순서 및 요령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사용을 해야 한다. 